1-9	디스커버리 제도 등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 도입	법무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법무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개별 피해자의 경우 소송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**디스커버리 제도(소송 전 증거절차)를 도입**하는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소송 부담 및 실익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곤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

○ **22대 국회 발의된 「민사소송법」 개정안 9건 국회 논의 지원**

주요 내용	22대 발의 법안
문서제출명령 개선	박범계 의원(9803), 박주민 의원(13083), 전용기 의원(14498)
진술녹취제도 도입	정준호 의원(3202), 박균택 의원(17104), 김현정 의원(19135), 김남근 의원(19658)
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	추미애 의원(18416)
지정전문가제도 도입	김남근 의원(19648)

□ 향후 계획

○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지원